

지방자치·국제

광주시의회, 광주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교급식 공급 업체간 담합 의혹” 이은방 의원

광주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에 대한 담합의혹이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은방(민주·북구 6) 의원은 15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공급업체 간 담합 의혹과 함께 남풀업체에 대한 소홀한 시설 위생점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에 집단급식소 등록업체는 311개 업체인데 이중 자체 단속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한데도 이를 업체와 급식계약을 맺은 일선 학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또 “급식공급업체 입찰 시 업체들의 입찰가를 살펴보면 10월 단위로 나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며 입찰업체 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계약을 맺을 때 남풀업체와의 최초 계약은 물론 재계약 시에도 위생점검을 철저

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로 업체 지도 단속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를 즉시 알리 적발업체와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 제한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진핑(習近平) 중국 신임 공산당 총서기가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공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예산 미집행 중단위기 조영표 의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광주시의 전기차 사업 중단 위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영표(민주·남구 1) 시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지난해 11월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 23억3100만 원(국비 12억 2000만원·시비 11억1100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 의회에서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가 제기됐

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진선기(민주·북구 1) 시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550개 균린공원 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은 15곳(2.6%)에 불과하다”며 “근린공원은 이동식별법과 청소년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대책적인 우범지역으로 CCTV 설치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광주시가 균린공원에 CCTV를 설치하려고 지난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차질을 빚

으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동호 교육의원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광주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1.8%로 전국 13위,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9.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곤 교육의원은 “2015 U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선수훈련시설을 위해 전남지역 시·군에 607억22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우수한 시설을 갖춘 광주지역 각급 학교체육관은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혈세 낭비를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진핑, 당 총서기·군사위 주석 승계**당권·군권 동시 장악… “공직자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

중국 공산당이 15일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強)을 비롯한 7인 상무위원 체제를 확정하고 제5세대 지도부를 정식 출범시켰다.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직을 한반에 넘겨받았다. 공산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 체회의(1종 전회)를 열어 상무위원회와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인선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중앙군사위는 주석 아래 부주석 3명, 8명의 위원 체제로 짜였다. 이미 중앙군사부 새 부주석에 취임한 許其亮·관창룡(范長龍)이 임명됐다. 나머지 부주석 한 자리는 조만간 상무위원 급(級)에서 채워질 예정이다.

상무위원회는 18기 1종전회 폐막 후 가진 내외신 접견행사에 시진핑-

석 자리로 물려받아 당·정·군 권력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가진 첫 연설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그는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지, 군중과의 괴리,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모든 힘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고 모든 당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라이(薄熙來) 전 총경찰 당서기의 비리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당과 정부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정풍’ 운동을 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시진핑은 아울러 “책임은 태산처럼 무겁고 해야 할 일 역시 중요하며 갈길은 멀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18기 1종전회에서는 상무위원 7명을 포함, 25명의 정치국원을 선출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심의 대선후로 미뤄지나**계수소위 구성도 못해… 22일 처리 불가능**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삼의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고통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 시한인 이달 22일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예산안이 대선 이후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운데 예

산인 증액·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5일 현재까지 계수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는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해 여야 모두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려고 기싸움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 무소속 예결위원인 김한표 의원의 입당 등으로 자당 예결위원이 27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내세워 계수소위를 ‘7명(새누리당)·5명(민주당)’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8월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수소위도 ‘7명(새누리당)·6명(민주당)’으로 구성하기로 사실상 여야간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후 진행된 합당·입당 등을 근거로 의석수를 늘려 달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불산단 일감 나눠달라” 대기업 찾아간 주영순 의원**삼성중·대우조선, 임원파견 등 신속한 반응**

일감부족으로 극심한 가동난에 빠진 대불산단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내 정상급 조선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일감 나눠주기를 호소하자 조선사들이 즉각 현지조사를 벌이고는등 아래쪽으로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방문,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만나 서남권 조선사업 실태를 직접

설명하고, 건조선박 블록과 기자재 발주·구매 등 일감 일부를 대불산단으로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틀뒤인 15일 오후 삼성중공업은 하유대 생산지원 담당 전무를 대불산단에 보내 선박불러제조사인 대야산업(대표 고장희)에서 대불산단 입주업체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대우조선해양도 16일 기술전무가 대불산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목포상의 회장을 역

임해 누구보다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조선사업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선의사합이 반영되면 대불산단 입주 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16일 기술전무가 대불산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